

이상경 사퇴·장동혁 투기 의혹 등 10·15 부동산대책 여진

與野 '갑론을박'... 정쟁으로 확산
부동산 정책 설계자 이상경 차관
부적절 발언·갭투자 의혹에 사퇴
野 부동산 정상화 특위 대표 장동혁
부동산 6채 보유... 실거주용 반박
대통령실 "머리·발 따로 사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대책 관련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의혹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여당은 야당 대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10·15부동산 대책이 정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제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李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 공식 사과 후 사의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전 차관은 한 경제 관련 유튜브에 출연해 "추후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못매를 맞았다. 또한 자신이 30억원대 아파트 갭투자의 책임을 받았음에도 갭투자 근절 대책을 내놓아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가 재현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민심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공개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이상경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전 차관은 다음날인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장동혁 대표에 불똥 튄 부동산 투기 논란

정치권에서 부동산 이슈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에게 불똥이 튀며 정쟁화되는 모습이다.

문규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와 부인 등 일가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

다"면서 "아파트만 4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까지 챙기고, 지역구가 아닌 대전에도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익집단, 내로남불의 본진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실거주용' 보유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보유한 6채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수요가 있는 것이고 거주하는 것들이지만 집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말을 보탰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거주용이라는 장 대표의 해명에 "부동산 여섯채가 실거주용이라면 머리와 발이 따로 사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며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여진은 계속, 보유세·재초환·3·3·3'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당의 부동산 쟁점을 두고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부동산 공급책과 규제책이 모두 나온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세제 강화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세제개편에도 용기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여당 내부에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나 문진석 원내수석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 시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대 50%를 국가가 분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것인데, 재초환제를 폐지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한편, 여당 일부 의원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으로 한 주택에 최대 9년(현행 4년)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계약은 최초 3년 거주를 보장하고 갱신권을 두 번 사용해 최장 9년을 살도록 하는데, 임대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野, 주말에도 70여건 민생법안 합의처리

‘응급실 뺑뺑이’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의결

여야가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중 주말에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70여건의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합의법안을 처리해갔다. 여야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이 지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세 개의 법안은 11월 본회의 때 상정될 수 있어 여야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때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고 날을 세웠지만, 이번 민생법안 처리엔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량을 타고 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 이송자 간의 전용통신 채널을 만들고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같은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 센터가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 현행법에 규정된 5%의 보증금 증액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취약지역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는 본회의에 보고됐다. 무안공항 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철근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아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는데, 추후 여야 논의를 통해 결정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가 모처럼만에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했음에도,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피지 분실 논란과 쿠광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대립할 예정이다. 다음달 6일엔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김현직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李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韓-캄 '스캠' 대응 주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
美 관세부과, 희토류 접근성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논의,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혜경 여사와 수행원들과 함께 출국했다. 이날부터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서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 정상들 비롯해 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도 참석한다. 중국 대표로는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 이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함께 한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희토류 접근성과 가자지구 휴전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일단 27일 훈 마네트 총리와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캄보디아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과 한국인 피해 근절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스캠 범죄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송환되는 등 범죄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라, 이와 관련해 양국의 대처 방안이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아세안 간 2000억불에 달하는 연간 교역과 1200만명을 상회하는 인적 교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식량·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아세안을 매개로 한·중·일 3국 모멘텀을 선순환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 투자·인프라·방산 등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해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다. /서예진 기자 syj@